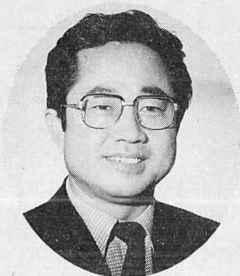


우리 농업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장원석 교수
(단국대 농업경제학과)

희망이 보인다. 우리 농업의 미래가 보인다. UR은 끝났다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강조했지만, 미국과 일본이 UR내용을 파기, 축소함으로써 재협상의 가능성이 실증되었다. 그리고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농정(農政)들과 협동조합의 개혁이 범국민적 힘에 의해 닦을 올렸다.

3월 10일, 학계, 시민, 소비자, 환경, 노동, 농민단체 등 194개 단체가 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약칭 운동본부)의 깃발을 내세우고 하나가 되었다. 운동본부는 보수와 진보의 차별성도, 시민과 농민의 구별도 없으며, 오로지 우리 농업을 살리자는 일념으로 뭉쳤다. 그러나 우리 농업의 장래는 아침햇살처럼 밝아질 수밖에 없다.

핵폭탄과도 같은 UR공세도 운동본부에 참가한 회원단체들의 결집된 실천력 앞에는 무력해질 것이다. 농업문제를 농민만의 문제로 축소시켜 보아온 정책담당자들의 의식도 달라질 것이다. 농업이 담당하는 공익기능, 즉 환경보전기능을 화폐액으로 평가하면 104조원에 이르고,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보호기능, 도시문제 완화기능, 식량안보와 지역

안보기능, 국토의 건강한 보전과 균형발전 유지기능, 국민정서 순화기능, 민족문화 유지기능 등이 범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상공업에 집중투자를 하면, 생산비 절감과 기술개발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들 하지만, 그 돈을 농업에 투자하면 이상과 같은 다양한 공익기능때문에 상공업보다 몇 배 이상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대부분의 공업은 환경을 오염시키지만, 농업은 환경을 보전시킨다. 따라서 환경정화를 위해 지출되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킨다. 눈에 보이는 단순한 산출가치만을 떠받들고, 보이지 않는 연관효과와 다양한 기능을 도외시한다면, 계산 자체도 비과학적이려니와 그것이 곧 국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제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떨어뜨린다.

한편, 정책개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국민의 책임이다. 이를 위해 농업관련 협동조합은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농민의 조합임을 확고히 해야 한다. 권력과 농민의 눈치를 살피다

가 결정적 시기엔 농민을 배반하는 기회주의적 임원들은 물러나야 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 모두는 정부와 협동조합의 잘못에 대해서는 체적을 가하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찬사를 아끼지 아니함으로써, 나라의 주인됨과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

마야흐로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하여 194개에 달하는 단체가 모인 범국민적 운동본부가 출범하였다. 제비가 왔다고 봄은 아니지만, 제비가 오면 반드시 봄은 온다. 희망이 보인다. 우리 농업의 미래가 보인다.

더구나 김영삼 대통령은 공약대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농어촌발전위원회와 농수산담당 수석비서관, 그리고 향후 10년동안 농어촌 발전을 위한 특별세를 연간 1조 5천억원씩 거두어 들어겠다고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농발위 위원 30명 중 농업분야와 비농업분야 출신의 각계 대표를 반씩으로 하였고, 농어민단체의 대표들은 보수적인 친정부단체뿐만 아니라 6공 1기까지만 해도 경원시되었던 상대적 진보단체의 대표까지 모두 망라하였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8.15 이후 최초의 것으로서 문민정부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부각시킨 듯하다.

그러나 첫 출발은 무언가 잘못된 점이 없지 않다.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년 12월 한미간에 타결된 UR내용중 쇠고기, 감귤, 낙농제품 등 기초농산물에 대하여 대폭 수정하는 조치를 위하여 부분적 UR 재협상을 벌여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되었다. 더구나 UR내용을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하는데, 단 한 차례의 토론후 UR 재협상 추진 연구를 3대 25라는 숫자로 부결시켰던 것이다.

이는 물론 작년 12월 농림수산부장관과 차관보, 경제기획원과 외무부의 차관보 등 우리나라 대표단이 세계 각국중 최악의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해 놓은 후 계속 잘했다고 홍보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청와대의 농수산담당 수석비서관도 UR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TV 등을 불러들여 맞장구쳤다. 이후 2월 21일 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성명을 발표, 부분적 UR 재협상이 가능함을 천명하였다. 2월 22일부터는 미국과 일본이 UR 협상을 파기, 축소시키고, 특히 미국은 540개 품목이나 수정하였다는 소식이 각 신문에 보도되어 그동안 학계, 시민, 농민단체에서 주장한 것이 옳고,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만을 꾸짖고 싶지는 않다. 이제라도 부분적 UR 재협상을 하고, 이를 안할 경우엔 국회비준동의를 거부하여 어떻게 하든지 수입개방조건을 유리하게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는 최대한의 협상노력을 해야지, 지금까지처럼 미리 포기하거나 변명할 궁리를 해서는 안된다. 진실로 온갖 노력을 하다가 강대국의 힘에 눌려 굴복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 국민은 그 아픔을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와 농민이 하나가 되고, 잠재된 위대한 저력으로 농민들은 생산비를 줄이고, 기술을 개발하며, 품질경쟁력과 안정성경쟁력을 높이는 데 진력할 것이다.

농발위에서 잘한 일은 있다. 농, 축, 수협이 개혁없이 농업은 살아나기 힘들다는 인식이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각종 정책대안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 **●**

